

- 제2회 정책경연의 장(2021년 3분기)
- 최종 결과(1~3위 정책제안서)

No.	위원회	정책명 (빠띠 제출 링크)	쪽
1위	사회복지위원회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a href="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95">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95</a>	2~3
2위	교육위원회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 <a href="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07">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07</a>	4~8
3위	소상공인위원회	복원기획자와 독립기술인에 대한 지원 <a href="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87">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87</a>	9~10

<p><b>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b></p>	<p>No. 1</p>
---	--------------

1. 제안 위원회 : 복지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치매관리법과 관련 서비스

시군구 치매안심센터가 65세 이상 노인을 전수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 인지장애판정이 의심되면 병원의 CT나 MRI 촬영을 통하여 인지장애 또는 치매를 판정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서비스

의료인의 치매 판정을 받고 공단이나 지자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여, 5등급(치매등급)부터 등급별 서비스유형(시설, 또는 재가)별 지원금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문제점

치매관리법상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와 병원의 진단을 받아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았으나, 5등급 이상의 치매관련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

이들은 대체로 일상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혼자 영위할 수 있음. 문제는 경도인지장애판정과 관련 약물복용에 대한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치매관련 정보와 콘텐츠는 완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정보와 동영상으로, 가벼운 인지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는 부재함.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관건이나, 현재 관련 서비스는 없는 실정임.

**• 주요 정책적 질문**

1) 치매에 이르지 않은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2) 치매에 이르지 않은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의 주체는 지자체인가 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는가?

**• 주요 정책내용**

1) 치매 문제는 공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등 지역사회 보호(실종 방지 등)와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로 타당

2)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

- 중앙치매센터의 당사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 혼자 살거나 또는 이정 소득이하의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으로는 뇌자극, 적정 영양/섭생, 적당 운동, 정서적 교감, 위생을 모니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복지 자원과 서비스 연계

• 기대효과

-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늦춤으로써 당사자와 가족 삶의 질 유지
- 운동요법/치료사, 영양사, 상담사 등 치매 관련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서비스를 통해 등급판정이 늦추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원 지출 예방

4. 개선방안 (입법 방향과 내용):

- 법 안 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 내용 : 제12조의 3 신설
- 제12조의3(경도인지장애판정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b>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b>	No. 2
---	-------

1. 제안 위원회 : 교육위원회

2. 제안 정책 :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 육성 및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본 제안에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기관 운용 취지 및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하고 4년제 일반대학만 다루었음

3. 정책 내용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올인 구조의 고착화

- '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발생\* 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전북(-4.5%), 전남(-4.2%), 경북·경남(-3.3%), 세종(9.3%), 서울(3.3%) ('20, 통계청)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

\*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률('09 → '19, %) : 10대 0.2 → 0.4, 20대 1.4 → 2.1

-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가중

\* 매출 1,000대 기업: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 부산상의)

- 지역별 인재의 역외 이탈률 및 인재 양성 자원 투입현황은 <표1>과 같음

<표1> 지역인재의 역외 이탈률

구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이탈율(%)	11.7	52.6	57.7	58.0	66.6	61.6	94.2	71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탈율(%)	73.4	79.5	58.7	60.7	71.4	49.3	35.4	

자료 : 2018.2월 대졸자 기준, 교육부

<표2> '18년 지역별 교육 및 인재양성 자원 투입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투입율 (%)	11.1	12.9	4.4	5.1	6.7	1.2	0.9	6.3	3.8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투입율 (%)	12.3	4.6	6.5	3.4	4.8	7.4	7.8	0.9	

자료 : '19년 재정사업심층평가<sup>1)</sup>

- ⇒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 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변기용, 2016)
- ⇒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국회입법조사처, 2021)
- ⇒ 지역 교육·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 구축** 필요(교육부, 2021)
- ⇒ 지역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진흥,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 지방대학 현황

- 2020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구분하면, 국립대학이 34개, 공립대학이 1개, 사립대학이 156개로 총 191개. 전문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 전문대학이 2개, 공립 전문대학이 7개, 사립 전문대학이 127개로 총 136개가 있음
- 지역을 기준으로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0개, 경상북도 18개, 충청남도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청북도 11개의 순
- 2021년도 대학 충원을 현황 및 권역별 대학 충원을 현황

1) 사업별로 실제 지역에 배분된 예산을 비중으로 조사하여 31개 내역사업 예산과 연계한 가중평균임(교육부, 2020)

<표3> 2021년도 대학 충원을 현황 및 권역별 대학 충원을 현황

구분	전체			일반대학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180,581 (92.2%)	15,367 (7.8%)
권역별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99.2%	94.8%	91.8%	91.0%	91.0%	89.5%

출처: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05.20.

- (지역) 학생 미충원은 교육의 질 저하, 지역대학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폐교 위기를 유발하며, 지역대학으로 인해 발생했던 경제효과에 타격을 주어 지역경제 위축, 고용 감소,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로 연결될 수 있음(KEDI, 2021)

- 수도권·비수도권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표4> 수도권·비수도권·유목적 표집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억 원, 천 명, 만 원, %)

구분	2018			2019		
	재학생 수	총 교육비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수	총 교육비	1인당 교육비
전체	1,723	270,024	<u>1,567.4</u>	1,701	270,417	<u>1,590.1</u>
수도권 (73개교)	775	137,666	<u>1,768.3</u>	779	137,666	<u>1,785.8</u>
비수도권 (123개교)	948	132,751	<u>1,403.0</u>	930	132,751	<u>1,427.8</u>
서울대학교 (2020)	27,813명		13,518	<u>4,860.6</u>		
부산대학교 (2020)	27,831명		5,579	<u>2,004.9</u>		
고려대학교 (2020)	29,580명		8,144	<u>2,753.2</u>		
호서대학교 (2020)	14,217명		1,672	<u>1,176.3</u>		

- 17개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국·공립대 경상비 제외)

<표5> 17개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비율)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비율)
수도권	40,073	40,185	42,661	<u>40,973</u> (43.2)	강원	3,364	3,464	3,545	<u>3,458</u> (3.6)
비수도권	52,707	53,169	55,663	<u>53,846</u> (56.8)	충북	3,332	3,139	3,584	<u>3,352</u> (3.5)
서울	26,117	26,575	27,944	<u>26,879</u> (28.3)	충남	5,238	5,148	5,646	<u>5,344</u> (5.6)
부산	7,156	7,341	7,218	<u>7,238</u> (7.6)	전북	4,002	3,955	3,993	<u>3,983</u> (4.2)
대구	3,872	4,414	4,361	<u>4,216</u> (4.4)	전남	1,872	1,857	2,127	<u>1,952</u> (2.1)
인천	2,113	2,147	2,108	<u>2,123</u> (2.2)	경북	7,145	6,413	6,897	<u>6,818</u> (7.2)
광주	4,181	4,389	4,227	<u>4,266</u> (4.5)	경남	3,508	3,441	3,586	<u>3,512</u> (3.7)
대전	6,338	6,344	6,829	<u>6,504</u> (6.9)	제주	776	848	950	<u>858</u> (0.9)
울산	1,509	2,072	2,223	<u>1,935</u> (2.0)	세종	413	345	475	<u>411</u> (0.4)
경기	11,843	11,463	12,609	<u>11,972</u> (12.6)	합계	92,780	93,354	98,324	<u>94,819</u> (100.0)

- 국가 경제 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6> 국가 경제 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발표연도	기준연도	구분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고등교육비 구성		
			금액 (US\$)	1인당 GDP 대비 비율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2018	2015	OECD 평균	<u>10,333</u>	<u>25.0</u>	<u>1.0</u>	<u>0.5</u>	1.5
			<u>3,639</u>	<u>10.2</u>	<u>0.7</u>	<u>1.2</u>	1.9
2019	2016	한국	<u>10,267</u>	<u>24.2</u>	<u>0.9</u>	<u>0.5</u>	1.5
			<u>3,985</u>	<u>10.7</u>	<u>0.7</u>	<u>1.1</u>	1.7

⇒ 수도권·비수도권 간 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상이하며 이는 대학교육의 질 격차로 나타남. 이는 “정부·지자체에서 산학협력 및 특성화를 지향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는 선발할 인재가 없다”는 문제로 이어짐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선발 이점과 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은 (한계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은 제외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과감한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고용 없이는 지역을 살릴 수 없으며 한국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 ⇒ ① 지방대학 우수 인재 선발 이점 제공 및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충  
 ② 지방대학의 자체적 교육경쟁력 강화  
 ③ 공공기관·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향상 및 방해조항 수정·삭제

□ 기대효과

-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축
-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 억제·주거비 등 매물 비용 감소에 따른 기회 창출 등 선순환 구조 구축

4. 개선 방안(관련 법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교육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국토교통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 등 (고용노동부)

1. 제안 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2. 제안 정책 : "복원 기획자(노점상인, 중간상인, 고물상, 폐지수거인)"와 "독립 기술인(소공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위상 제고 및 지원 법률 제안
3. 정책 내용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복원 기획자는 고장나거나 버려진 사물의 가치를 판별하고, 그것을 기술인 혹은 소비자와 연결함으로써 상품화하는 작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물상, 노점상인, 중고거래 전문업자(자동차, 시계, 골동품 등), 나까마, 중고차 딜러, 이베이 셀러 등 주로 다루는 사물의 분야가 특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기술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독립적인 작업장에서 수리-제조 (수)공업을 수행하는 소공인으로서, 기존의 시장에서는 '사설수리업자' 등으로 호칭되곤 합니다. (복원 기획자, 독립기술인이라는 명칭은 종로 세운상가 일대에서 시계 수리 복원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주)앵커랩에서 짓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호명과 사회적 인식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공공에 인식되기를 희망합니다.)

○ 주요 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

1)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용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기술인들은, 도심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물의 삶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질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독립기술인들의 생업 기반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들이 다양한 부품 수급 경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상생하는 대안 (매뉴얼 공유, 부품 수급 경로 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독립기술인 뿐 아니라 제품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다양한 환경, 방식, 시공간에서 자신의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수리에의 권리(The right to repair)"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중고품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복원 기획자들은 독립기술인들에게 지속적 일거리를 제공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굴하는 대부분의 중고품, 쓰레기들은 매입 증빙이 불가능한 비공식 경제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노동을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마련과 함께, 매입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품의 판매와 수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회계-세법 자문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물의 가치를 판별하는 이들의 기술을 전문 분야로 인지도 높이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 및 교육 인

프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링크 :

<https://map.sewoon.org/?post=16527>

<https://map.sewoon.org/?post=17368>

<https://map.sewoon.org/?post=21286>